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정 청사진 본격 설계 착수

‘전남광주대통합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정은승 위원장 “성장 변곡점 만들겠다”  
민형배 “압도적 성장·시민주권” 강조  
“정부·기업, 조만간 반도체 관련 발표”



전남광주대통합기획위원회 출범식이 8일 오전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와 정은승 위원장 및 기획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통합기획위원회’(이하 대전환기획위)가 특별시정 청사진 설계에 착수했다. 대전환기획위는 8일 오전 빛가람혁신도시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대전환기획위는 전국 최초로 광역시와 도가 하나의 행정 권역으로 통합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하는 공식 기구다.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대전환기획위는 시민주권·산업경제·과학기술·도시공간·문화관광·보안복지 등 6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포함해 총 7개 분과, 20명

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식 활동 기한인 7월20일까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 여건을 포함한 통합시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100일 시민체감 정책’을 발굴한다. 민형배 당선자는 인사말을 통해 “현판식을 하고 나니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걸음을 내딛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걸음을 내딛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걸음을 내딛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 당선자는 “통합특별시 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이고, 시정 운영 전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시민주권”이라며 “성장이 시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시민주권이 그 성장을 시민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두 개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들은 통

합하면 정말 삶이 나아지는지, 병원과 교통, 돌봄이 더 편리해지는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며 “대전환기획위가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설계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정은승 대전환기획위원장은 “행정 통합을 넘어 경제·산업·문화·교육·도시·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압도적 성장은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변곡점을 만들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주목하는 곳으로, 쉼 없이 데이터센터를 짓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대전환기획위가 그 첫 번째 변곡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기자 브리핑에서 민 당선자는 “머지않아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와 기업의 발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밝힌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재정 기자

##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자 인수위 구성

‘K-교육특별시 준비위’ 12명 참여  
위원장 김경범 前서울대학교 교수  
내일 출범...광주·전남 2개소 운영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격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8일 첫 상례례를 갖고 성공적인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준비위는 10일 출범식을 갖고 7월31일까지 운영되며, 양 지역의 균형과 화합을 위해 광주본부와 전남본부 2개소로 분할 운영된다.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준비위는 형식적인 자문기구를 탈피하고 선거 공약을 신속하게 실무 과제로 재편하기 위해 현장·실무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김경범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김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전문가다. 부위원장은 문승태 전 순천대학교 부총장이 임명됐다.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임창욱 전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장, 이환호 전 고려교 교장, 강영광 주송정초 교장, 김두석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사

무관, 안병모 전남교육청 정책연구소장, 한창수 영강초 교장, 김권오 순천선혜학교 사무원, 김인 목포여고 사무원 등 12명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준비위 대변인은 김성수 전 전남일보 취재국장이다. 김경범 준비위원장은 “전남·광주의 안정적인 통합을 이뤄내고 동시에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준비위는 9일 오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참배하고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비전을 사·도민들에게 직접 밝힐 예정이다. /박성욱 기자

## ‘대체불가 대한민국’ 청사진 제시...2년차 국정 박차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K이니셔티브’ 4대 국정목표 제시  
‘초격차 산업 강국’ 비전 등 내놔  
지방선거 결과에는 “국민의 경고”  
내각·與에 겸손한 국정 운영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는 집권 2년차 국정구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혔다. 첫해엔 계엄·탄핵 직후 집권해 회복과 정상화 과제를 어느 정도 이루고 통상 파괴와 중동 전쟁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면, 국정 2년차엔 본격적으로 대전환을 향한 전례 질주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고 언급한 대목에서도 그만큼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K이니셔티브’ 구상으로 산업과 일상에 대한 인공기능 전환, 자주국방 계획 국가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구 중 가장 모범적 에너지 전환 국가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힘찬 도약을 약속했다. 올해 구상으로는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한 4대 국정목표를 내놨다. ‘모든 국민과 국가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모두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국민 모두가 합리적인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산업 강국 비전을 설명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대체 불가’한 나라로 대도약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산업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지역·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면서 포용 성장 비전을 다시금 역설하고, 반도체 특수로 인한 초과 세수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외교·안보 구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등의 과제가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더욱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정에 더욱 책임질을 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인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3 지방선거 평가를 묻는 말에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 때와 역할이 달라야 한다면서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되지만, 집권했을 때는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생각과 배경이 다른 이들에 대한 포용도 주문했다. /연합뉴스

## “투표권 보장 못한 문제 심각”

李대통령-4부 요인 청와대 회동  
‘투표지 부족 사태’ 대처 방안 논의  
“진상 규명·독립성 개선” 한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과 회동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회동에서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는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행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며 “어떤 형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어떤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4부 요인들도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 의장은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자성과 철저히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장은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에 확실한 처방과 근본적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전화 위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을 상쳐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뼈아픈 (성찰의) 계기로 삼아 사인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선거제도와 운영의 모습을 냉철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총리는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에게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동 선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방향을 잡았고, 저는 여제 정부가 주관하고 여야,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에 더해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누어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與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8월17일 개최”

권역별 순회경선 실시 방침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파전

더불어민주당은 8월17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송승환 사무총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고위원회에서 정기 전당원대회를 8월 중 하되 가장 이른 시일이인 8월17일 진행하기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당헌 부칙 개정을 통해서 기간을 다소 여유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주 수요일 최고위 회의와 목요일 당무회, 다음 주 중앙위원회를 통해 전대 시기, 절차에 대한 제도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되고 당 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

에 대한 후보 등록을 받을 것”이라며 “당 대표는 4인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을 하고,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평가위원회 설치도 의결했다. 조 사무총장은 “평가위는 내·외부 인사로 균형되게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동으로 한다”며 “구체적 인선은 수요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기구를 통해 선거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 엄중한 현실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당 기조, 전략, 방향을 세우는 데 큰 참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